

노동시장 제도, 임금분산, 그리고 복지정책*

홍 경 준

(성균관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제도적 상보성, 노동시장제도, 중위소득자, 임금분산, 복지정책

1. 머리말

생산영역을 구성하는 제도와 복지영역을 구성하는 제도 사이의, 혹은 개별 사회경제정책 사이의 관계가 사회경제적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관찰이 비교사회정책 분야의 연구들을 통해 산출되고 있다(Hall and Soskice, 2001; Amable, 2003; 안상훈, 2005; 백승호, 2005).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제도나 정책 사이에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y)¹⁾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 이 연구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1) 한쪽을 소비하면 다른 쪽도 따라서 소비되는 관계에 있는 보완재(complementary goods)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한 제도의 존재, 혹은 산출하는 효과가 다른 제도의 존재, 혹은 산출하는 효과에 의해 같은 방향으로 증가할 때 두 제도는 상보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보다 더 나은 사회경제적 성과가 산출된다. 상보성이 높을 경우 제도들은 사회성원들에게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억제할뿐더러 파생하는 효과들의 상쇄관계를 축소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제도의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경험적 관찰에 따라 여러 국가들을 유형화할 뿐, 그러한 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규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는 특정 방식으로 구성된 제도가 사회성원의 선호에 대해 신호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러한 제약 내에서 표출된 사회성원의 선호가 또 다른 제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사이에 상보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이 제도의 하나라면 정책들 사이의 정합성이 정책의 이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여기에서 가능하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 제도와 복지 정책에 초점을 둔다. 즉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반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의 상보성이 존재하며, 그것을 매개하는 것이 임금분산에 제약된 사회성원의 선호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에서 결핍되어 있는 측면, 즉 제도 사이의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점이 그 하나라면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 둘이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노동시장 제도가 어떤 조건에서 임금분산의 축소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3절에서는 2절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본다. 4절은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한다.

2. 노동시장 제도, 임금분산,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

1) 임금분산과 복지정책

합리적인 사회성원들은 자신들이 재분배를 통해 얻는 이득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과 일치하는 수준까지의 재분배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정책에 반영된다면, 재분배에 대한 선호정도가 다른 사회성원들 중 누가 콩도세르 승자²⁾가 되느냐에 따라 복지정책의 발전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복지정책의 발전을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논의들(Stephens, 1979; Korpi, 1983)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의 기본 가정은 복지정책이 자원을 재분배하는 장치라는 점이다. 하지만, 재분배 장치로만 복지정책

2) 하나의 안건(unidimensionality)에 대해 두 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투표(pairwise election)에서 다른 모든 정책 대안을 물리칠 수 있는 대안을 콩도세르 승자(Condorcet winner)라 한다.

을 이해하는 것은 일면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Baldwin, 1992; Moene and Wallerstein 2001; Iversen and Soskice, 2001).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복지정책은 강제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공공 장치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선호 정도는 그들의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다르며, 위험회피 성향이 다른 사회성원들 중 누가 콩도세르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복지정책의 발전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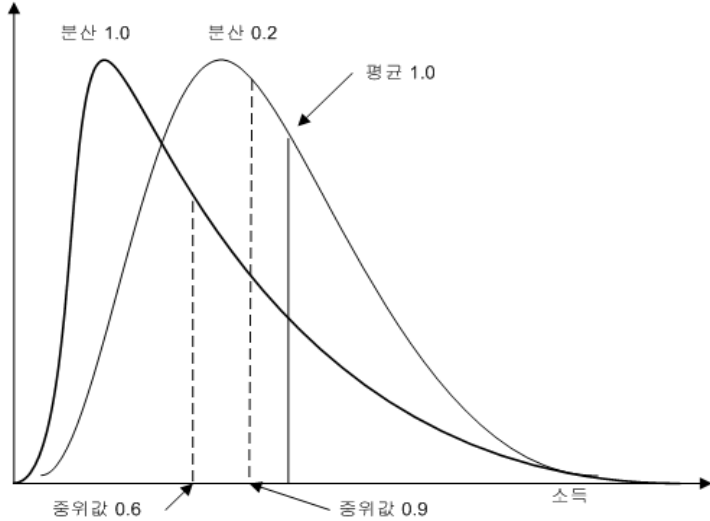
재분배에 대한 선호, 혹은 위험회피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 글은 그들의 소득에 초점을 둔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을 가진 사회성원이 콩도세르 승자가 될까? 그러한 사회성원은 바로 중위소득을 가진 사회성원이다.³⁾ 중위소득자가 콩도세르 승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회의 소득분포 상에서 중위소득자의 위치는 임금의 분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1>은 임금의 분산이 1.0인 경우와 0.2인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 임금소득이 1.0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중위소득은 임금 분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평균 임금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금 분산이 커지면 중위소득자의 위치는 보다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임금 분산의 축소는 중위소득자의 위치를 평균 임금소득 쪽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복지정책의 발전 정도가 중위소득자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복지정책에 대한 그의 선호는 소득분포 상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임금 분산의 변화가 사회성원의 선호를 제약하는 것이다. 임금 분산의 변화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노동시장 제도라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기본 가정

고용여부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 사회를 가정해 보자. 이 사회에서 일부의 사회성원들은 주어진 기간 중에 실업이나 질병, 재해,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해 실업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그 확률을 p 라 하자. 이들이 다시 고용되어 임금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은 q 라 하자. 또한 한 시기 동안 사회성원이 고용되거나 실업될 확률은 바로 앞 시기의 고용과 실업 확률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이 사회에서 고용된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a^4 라 하고 고용되지 않은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3) Black(1948)은 모든 투표자들의 선호가 단봉성(single peakedness)을 가지고 있다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대안이 콩도세르 승자가 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호의 단봉성은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 Roberts(1977)는 선호의 단봉성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세액과 제공되는 복지급여가 각각 τ 와 s 라 할 때 모든 (τ, s) 에서 개인들이 가지게 되는 세후소득(소비)의 크기가 세전소득의 크기에 따라 단조(monotonically) 증가한다면, 중위소득을 가진 투표자가 콩도세르 승자가 된다는 공리를 제시하였다. y_i 의 소득을 가진 투표자가 τ 와 s 에 따른 간접효용함수 $w_i(\tau, s)$ 를 가진다고 하자. 이 때 어떤 y_i 에게 있어 $s > s'$ 일 때 $w_i(\tau, s) > w_i(\tau, s')$ 라면, 모든 $y' < y_i$ (혹은 $y' > y_i$)에게 있어 $w'(\tau, s) \geq w'(\tau, s')$ 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세후소득(소비)과 세율 사이의 한계대체율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단조증가하기 때문에 상이한 소득을 가진 두 투표자의 무차별 곡선은 기껏해야 한 번 교차할 수 있음(이 경우 소득이 낮은 투표자의 무차별곡선이 소득이 높은 투표자의 무차별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지나게 된다)을 의미하기 때문에 single-crossing property라고 한다. single-crossing property는 중위 소득자가 콩도세르 승자가 될 수 있게 한다. 즉 투표에서 중위소득자의 선호가 채택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Persson and Tabellini(2000: 19-25)를 참조하라.

β 라 하면($\alpha = 1 - \beta$), 마르코프 과정(Markov process)에 의해 $pa = q\beta$ 이다. 즉 $\alpha = q / (p + q)$ 이며, $\beta = 1 - \alpha = p / (p + q)$ 이다.



<그림 1> 임금소득의 분산 정도와 중위소득자의 위치

사회성원들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복지정책은 그들이 벌어들인 임금소득에 대한 단일세 (flat tax) t 로 충당되며, 모든 조세수입은 복지정책에 지출된다고 가정하자. 사회성원들이 획득하는 시간당 임금소득의 평균값을 \bar{w} 라 하고, $l(t)$ 를 근로에 투입한 시간, 혹은 근로에 투여한 노력이라고 하면 사회성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 수입 T 와 사회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총 복지급여 R 은 다음과 같이 식 (1)로 표시될 수 있다.

$$\begin{aligned} T(t) &= \alpha \cdot l(t) \cdot t \cdot \bar{w} = R \\ T(t) &= \alpha \cdot \tau(t) \cdot \bar{w} = R \end{aligned} \tag{1}$$

$\tau(t) = l(t) \cdot t$ 라 하고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가 노동 공급의 감소와 같은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초래한다면, $\tau(t)$ 함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⁵⁾

$$\begin{aligned} i) \tau'(t) &> 0, \tau''(t) < 0 \\ ii) \tau'(0) &= 1 \\ iii) \tau(0) &= 0 \end{aligned} \tag{2}$$

4)임금 소득을 가지는 사회성원을 이 사회의 중위소득자로 두기 위해서 $\alpha > 1/2$ 이라고 가정한다.

5)계산의 편의를 위해 $l(t) = \frac{1}{1+t}$ 라 하자. 이 때 $\tau(t) = \frac{t}{1+t}$ 이므로 식 (2)의 여러 특성들이 쉽게 도출될 수 있다.

식 (2)에서 i)은 세월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 자증손실의 증가율(increasing rate)이 증가하기 때문에 $\tau(t)$ 는 강오목 함수(strictly concave function)임을 의미하며, ii)는 세월이 0일 때 자증손실은 없다는 점을, iii)은 세월이 0 이라면 $\tau(t)$ 는 0임을 나타낸다.

전체 복지 급여 중에서 실업이나 질병, 재해, 노령 등으로 인해 임금소득을 상실한 사회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몫을 r 이라 하면, 고용되어서 w 의 임금소득을 가지는 사회성원이 누릴 수 있는 과세-이전 후 소비(post tax and transfer consumption)는 다음과 같이 식 (3)으로 표시될 수 있다.

$$C_E(w) = (1-t) \cdot w + \frac{(1-r)T}{\alpha} \quad (3)$$

한편 고용되지 않은 사회성원이 누릴 수 있는 과세-이전 후 소비는 다음과 같이 식 (4)로 표시될 수 있다.

$$C_N = \frac{rT}{\beta} = \frac{rT}{1-\alpha} \quad (4)$$

사회성원들에게 α 와 β 는 고용된 상태와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 처할 수 있는 확률이므로, 그들은 두 상태 모두를 고려하여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려 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미래 소득에 대한 할인율 μ 를 고려하지 않는다면,⁶⁾ 기대효용은 다음과 같이 식 (5)로 표시할 수 있다.

$$V = \alpha \cdot u(C_E) + \beta \cdot u(C_N) = \alpha \cdot u(C_E) + (1-\alpha) \cdot u(C_N) \quad (5)$$

식 (5)에서 $u(\cdot)$ 는 소비에 대한 사회성원의 효용을 의미하는데, 효용함수에 대한 통상적인 가정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한다.

$$\begin{aligned} & i) u_c > 0 \\ & ii) u_{cc} < 0 \\ & iii) \lim_{c \rightarrow 0} u'(c) = \infty \\ & iv) \mu \equiv -\frac{c \cdot u''(c)}{u'(c)} > 1 \end{aligned} \quad (6)$$

6) 현재 기간을 dt 라 하고, 미래의 한 기간 동안 주어지는 소득이 할인율 e^{-rdt} 로 할인된다면, 각 사회성원의 기대효용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V^E &= u(C_E)dt + e^{-rdt}[(\beta dt)V^N + (1-\beta dt)V^E] \\ V^N &= u(C_N)dt + e^{-rdt}[(\alpha dt)V^E + (1-\alpha dt)V^N] \end{aligned}$$

하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미래소득에 대한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다. 미래소득에 대한 할인율을 고려한 분석은 Moene and Wallerstein(2001)을 참조하라.

사회적 위험의 분산이 복지정책의 핵심적 기능임을 고려한다면, 사회성원들은 위험회피 성향을 가진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식 (6)의 iv)에서 Arrow-Pratt의 상대적 위험회피도(relative risk aversion) 계수는 1보다 큰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는 이 계수에 대한 경험적 추정의 결과(Friend and Blume, 1975)에 따른 것이다.

(2) 복지정책의 선택

이하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

- ① 상황 1. 모든 사람이 고용되어 있고, 조세의 자중손실은 없다고 가정할 때($\alpha=1$, $r=0$, 그리고 $\tau'(t) > 0$)이 아니라 $\tau'(t)=1$).

상황 1에서 사회성원의 기대효용은,

$$V = u(C_E) \quad (7)$$

식 (7)을 t 에 대해 미분하면,

$$\frac{dV}{dt} = \frac{du(c_E)}{dt} = u'(c_E)[\tau'(t)\bar{w} - w] = u'(c_E)[\bar{w} - w] \quad (8)$$

i) $\bar{w} > w$ 인 사회성원의 경우 언제나 $\frac{dV}{dt} > 0$ 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성원은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의 세율을 선호한다. $0 \leq t \leq 1$ 이므로 이 사회성원은 $t = 1$, 즉 100%의 세율을 선호한다.

ii) $\bar{w} < w$ 인 사회성원의 경우 언제나 $\frac{dV}{dt} < 0$ 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성원은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소의 세율을 선호한다. $0 \leq t \leq 1$ 이므로 이 사회성원은 $t = 0$, 즉 0%의 세율을 선호한다.

즉, 상황 1의 경우 어떤 사회성원의 소득 수준이 이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보다 적다면 이 사회성원은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00%의 세율을 선호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의 소득이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보다 큰 사회성원은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0%의 세율을 선호하게 된다. 사회 전체의 소득이 대수분포하고 중위 소득자의 소득은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보다 낮다면 ($w_{median} < \bar{w}$), 중위 소득자는 100%의 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에 투표할 것이다. 중위소득자가 콩도

세르 승자이므로 이 사회에서는 100%의 세율로 충당하는 복지정책이 선택된다.

- ② 상황 2. 모든 사람이 고용되어 있고, 조세의 자중손실이 있을 때($\alpha=1$, $r=0$, 그리고 $\tau(t)=$ 식 (2)의 조건을 따름).

상황 2에서 사회성원의 기대효용은,

$$V = u(C_E) \tag{9}$$

식 (9)를 t 에 대해 미분하면 해인 t^* 를 구하기 위한 제 1계차 필요조건(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에 따라,

$$\begin{aligned} \frac{dV}{dt} &= \frac{du(c_E)}{dt} = u'(c_E)[\tau'(t)\bar{w} - w] = 0 \\ u'(c_E) > 0 \text{ 이므로, } \tau'(t)\bar{w} - w &= 0 \text{ 따라서,} \\ \tau'(t) &= \frac{w}{\bar{w}} \end{aligned} \tag{10}$$

i) $\bar{w} = w$ 일 때, $\tau'(t) = 1$, 그런데 $\tau'(0) = 1$ 이므로 $t^*=0$

ii) $\bar{w} > w$ 일 때, $\frac{dt^*}{dw} = \frac{1}{w} \frac{1}{\tau''(t)} < 0$ 이므로, 임금소득이 \bar{w} 에 가까워질수록 t^* 는 감소

상황 2에서 자신의 소득수준이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과 같거나, 더 높은 사회성원은 세율이 0인 정책, 즉 복지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이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보다 적은 소득자의 경우는 0 이상의 세율을 부과하는 정책, 즉 복지정책을 선호하는데 그 선호 정도는 소득분포 상에서 보다 낮은 쪽에 있을수록 커진다. 평균 임금소득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임금의 분산이 커질수록 소득분포 상에서 중위소득자의 위치는 보다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의 분산이 커질수록 중위소득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선호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중위소득자가 콩도세르 승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소득의 분산 정도가 커질수록 복지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복지정책을 재분배의 장치로 이해하는 여러 논의들의 기본 가정이기도 한데, Romer(1975), Roberts(1977), Meltzer and Richard(1981)에 의해 이론모형으로 정립된 바도 있다.

- ③ 상황 3. 사회성원들이 각각 고용된 상태와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 처할 수 있는 확률이 α 와 β 이며, 복지정책은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제공되며, 조세의 자중손실이 있

을 때($\alpha \neq 1$, $r=1$, 그리고 $\tau(t)$ =식 (2)의 조건을 따름). 상황 3은 상황 1이나 상황 2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이 글에서 상정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경우 복지정책에 대한 중위소득자의 선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자.

상황 3에서 사회성원의 기대효용은,

$$V = \alpha \cdot u(C_E) + (1 - \alpha) \cdot u(C_N) \quad (11)$$

식 (11)을 t 에 대해 미분하면 해인 t^* 를 구하기 위한 제 1계차 필요조건(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에 따라,

$$\frac{dV}{dt} = \frac{du(c_E)}{dt} = [(1 - \alpha)u'(c_N)\tau'(t)\bar{w}] - [\alpha u'(c_E)w] = 0 \quad (12)$$

식 (12)의 양변을 전미분하여 정리하면⁷⁾,

$$\frac{dt^*}{dw} = \frac{\alpha}{1 - \alpha} \cdot \frac{u'(c_E) + u''(c_E)w(1 - t)}{\bar{w}u'(c_N)\tau''(t)} = \frac{\alpha}{1 - \alpha} \frac{1 - \mu}{\bar{w}u'(c_N)\tau''(t)} > 0 \quad (13)$$

결국 복지정책이 임금소득을 상실하는 위험을 공적으로 분산하는 장치라 가정한다면, 중위소득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가 선호하는 세율의 크기도 증가하며, 그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즉 중위소득자의 상대적 위험회피도가 클수록(상황 3에서 μ 의 크기),⁸⁾ 복지정책이 고용되지 않은 사회성원의 소득을 대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수록(상황 3에서 r 의 크기) 임금소득의 분산 감소는 사회성원들로 하여금 복지급여의 증가를 선호하게 한다. 복지정책을 사회적 위험을 공적으로 분산하는 장치로 이해하는 이러한 이론모형은 Moene과 Wallerstein(2001)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제시된 바 있다.

7) 식 (13)의 분모에서 $u'(c_N) > 0$, $\tau''(t) < 0$ 이므로, 분모의 부호는 (-)이다. 또한 식 (13)에서 좌변의 분자를 $u'(c_E)$ 로 나누면, $1 + \frac{u''(c_E) \cdot c_E}{u'(c_E)} = 1 - \mu$, 여기에서 상대적 위험회피도의 계수 μ 는 $\mu > 1$ 이므로, 분자의 부호 또한 (-)이다.

8) Iversen과 Soskice(2001)는 기업 특수적 기술(firm specific skill)을 가진 사회성원의 경우 실업에 따른 위험도가 더 커진다는 점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기업 특수적 기술의 활용비중이라는 생산체제의 특성과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바로 1보다 훨씬 큰 상대적 위험 회피도를 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임금분산에 대한 노동시장 제도의 효과

노동시장 제도는 임금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만일 특정한 유형의 노동시장 제도가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분산을 줄인다면 이는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 말까지 사민주의 국가들,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연대임금정책과 중앙교섭,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노동시장 제도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이러한 사민주의 국가들의 노동시장 제도들을 이식하려는 시도가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시도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 3의 길 노선’, 혹은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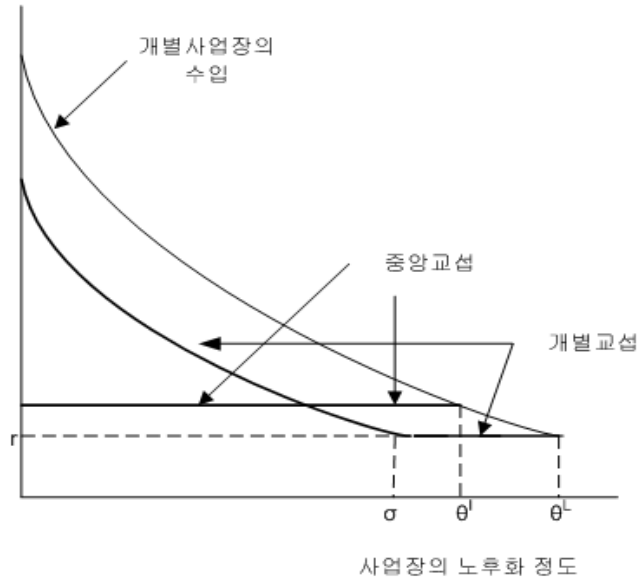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말까지,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국가들에서는 실업률의 지속적인 상승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에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와 같이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에 속한 나라들은 임금분산의 축소와 완전고용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이들이 거둔 이러한 성과는 상당기간 동안 사회과학의 전 영역에 걸쳐 스칸디나비아 모형(Scandinavian model)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스칸디나비아 모형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방식은 논자들(Stephens, 1979; Korpi, 1983; Goldthorpe, 1984)에 따라 다양했지만 이들 국가들이 가진 독특한 노동시장 제도들, 즉 연대임금정책과 중앙교섭,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임금분산의 축소와 완전고용의 달성⁹⁾에 기여했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Freeman, 1988; Moene and Wallerstein, 1999; Hibbs and Locking, 2000).

연대임금정책과 중앙교섭,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책이었다. 연대임금정책이 노사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평등의 증진과 효율성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연대임금정책에 대한 사용자의 지지는 개별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유동(wage drift)의 억제를 그것이 얼마나 강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데, 중앙교섭이 바로 그를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했다. 한편 연대임금정책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계 부문의 퇴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실업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한계 부문의 퇴출이 만들어내는 실업의 증가를 통상적인 유효수요 관리 정책으로 대응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계 부문으로부터 성장 부문으로의 원활한 노동력 재배치를 피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성장 부

9) 연대임금정책과 중앙교섭,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노동시장 제도들이 사민주의 국가들의 독특한 노동시장 제도로 언급되긴 하지만, 사실 이러한 세 가지의 노동시장 제도들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활용한 나라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정도일 뿐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일부만을 활용했을 뿐인데, 가령 덴마크는 연대임금정책을 제도화했지만 완전고용을 추구하지는 않았으며, 오스트리아는 중앙교섭과 완전고용을 추구했지만 임금분산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Moene and Wallerstein, 1999).

문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한계 부문의 퇴출과 성장 부문의 진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생산성의 증가가 고용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이 높은 성장 부문의 시장 진입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집행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성이 높은 성장 부문의 시장 진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¹⁰⁾



<그림 2> 사업장에서의 임금 분포: 개별교섭과 중양교섭의 비교

생산물의 가격이 세계시장에 고정되어 있는 여러 사업장들이 있다고 가정하자. 또한 고용량은 이 사업장들의 수에 비례하며, 각 사업장의 생산성은 사업장이 시장에 진입한 시간의 길이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하자. 즉,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장의 생산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사업장의 시장 진입은 매물비용(sunk cost)을 수반하므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사업장의 진입이 바로 생산성이 가장 낮은 사업장의 퇴출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가정하자. 여기에서 생산성의 변화와 고용량의 변화는 새로운 사업장의 시장 진입과 낡은 사업장의 시장 퇴출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림 2>의 횡축은 생산성의 크기에 따라 각 사업장을 나타낸 것이다. 생산성은 시간의 함수로 가정하므로, 사업장의 노후화 정도가 클수록 각 사업장의 총수입은 우하향하는 지수곡선(exponential curve)으로 나타낼 수 있다. r 을 시장의 균형임금, 혹은 단체교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되는 임금수준이라 하면, r 을 나타내는 수평선과 사업장의 총수입을 나타내는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θ' 이 바로 낡은 사업장의 퇴출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제 두 가지의 단체협상을 생각해보자. 먼저 개별교섭의 경우이다. 노동자와의 개별교섭에서 r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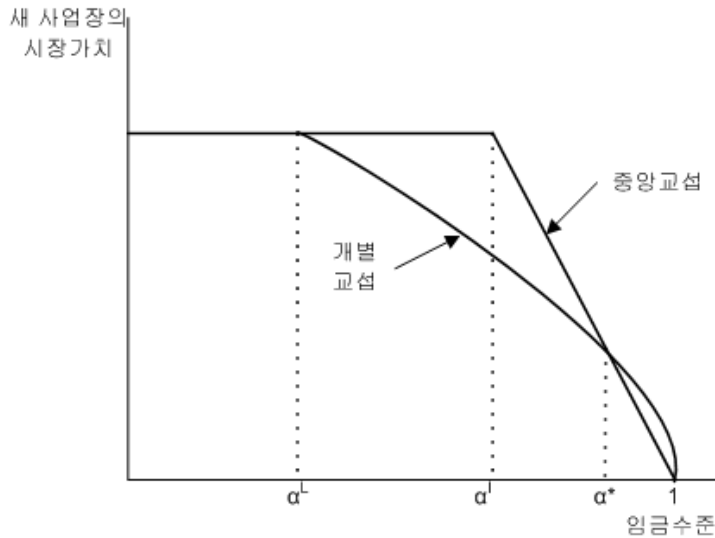
10)이하의 논의는 Moene and Wallerstein(1999)에 의존한다.

사업주에게 일종의 제약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r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교섭에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준적인 임금교섭력 이론(wage bargaining theory)에 따르면, 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임금수준(α)은 개별 사업장의 노동자 1인당 수입의 일정 비율($0 < \alpha < 1$, 그리고 $r \leq \alpha$)이다. 결국, 개별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임금수준은 <그림 2>에서 σ 지점 이전까지는 사업장 총수입의 일정 비율로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σ 지점 이후부터는 r 을 나타내는 수평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교섭은 사업장의 진입과 퇴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σ 지점 이후부터는 r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교섭은 한계 사업장의 퇴출을 결정하는 데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신규 사업장의 진입은 개별교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높은 임금 프리미엄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장의 시장가치를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매 시기 되풀이되면,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신규 사업장의 시장 진입은 적어지고, 그에 따라 생산성의 하락과 고용량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중앙교섭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앙교섭에서 임금수준은 전체 사업장 평균수입의 일정비율에서 정해지는데, 개별 교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수준은 r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교섭에서 결정되는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한계 사업장의 퇴출은 보다 이른 시간에 이루어진다($\theta^L \rightarrow \theta^I$). 또한 개별교섭의 경우보다는 더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사업장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임금 인상의 폭이 생산성의 증가분을 넘어서거나, 개별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인상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교섭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사업장의 시장 진입은 제한될 수도 있다. 결국 중앙교섭은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우선 중앙교섭은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r 수준 이상으로 높임과 동시에 한계 사업장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서 생산성의 증가를 초래한다. 하지만 동시에 생산성이 높은 신규 사업장의 진입이 그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는 중앙교섭을 통해 임금수준(α)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측면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그림 3>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생산성이 높은 사업장의 시장가치를 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임금수준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임금수준이 시장의 균형임금, 혹은 단체교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되는 임금수준 r 과 동일하다면, 교섭의 경제적 효과는 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α^L 과 α^I 는 각각 개별교섭과 단체교섭의 경제적 효과가 0인 경우에 노동자가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임금수준을 나타내는데, 식 (14)와 같이 개별교섭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경우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신규 사업장)의 총수입이 임금을 결정하고, 중앙교섭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의 평균 총수입이 임금을 결정하므로, $\alpha^L < \alpha^I$ 이다

$$\begin{aligned}
 r &= \alpha^L \times P = \alpha^I \times \bar{P}, \text{ 따라서} \\
 \alpha^L &= \frac{r}{P}, \alpha^I = \frac{r}{\bar{P}}, \\
 P &> \bar{P} \text{이므로, } \alpha^L < \alpha^I
 \end{aligned}
 \tag{14}$$



<그림 3> 신규 사업장의 시장가치; 개별교섭과 중앙교섭의 비교

이제 α 의 변화가 이 신규 사업장의 시장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alpha \leq \alpha^L$ 인 경우, α 의 변화는 이 신규 사업장의 시장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alpha^L < \alpha \leq \alpha^I$ 인 경우, 개별교섭을 통한 α 의 증가는 이 사업장의 시장가치를 감소시킨다. 물론 이 경우 중앙교섭을 통한 α 의 증가는 이 신규 사업장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alpha > \alpha^I$ 인 경우 개별교섭과 중앙교섭 모두에서 이 사업장의 시장가치는 α 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결국 <그림 3>에서 $\alpha < \alpha^*$ 인 경우, 중앙교섭은 개별교섭과 비교할 때 신규 사업장의 시장가치를 더 높게 한다. 생산성이 높은 신규 사업장의 시장 진입은 해당 사업장의 시장가치가 더 높을 때 촉진되므로, $\alpha < \alpha^*$ 인 경우 중앙교섭은 개별교섭에 비해 신규 사업장의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결국 노동시장 제도가 평등의 증진과 효율성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금유동의 억제, 생산성이 높은 성장 부문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현저해진 세계화(globalization)는 노동을 다원화시켜 중앙교섭을 통한 임금유동의 억제를 어렵게 했고, 생산성이 높은 성장 부문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을 가로막았다. 임금분산 축소와 완전고용이라는 목표와 노동 생산성의 증가라는 목표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는데, 한 연구(Hibbs and Locking, 1995)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의 노동시장 제도는 공업 생산과 노동 생산성을 대략 8~14% 정도 증가시켰지만, 그 이후에는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사민주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된 것은 공공부문의 확대였다. 둔

화된 성장부문 일자리를 대신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확장은 완전고용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으며, 임금분산의 확대를 억제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시민주의 국가들에서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데(Esping-Andersen, 1999; Huber and Stephens, 2001), 이는 바로 임금분산의 축소와 완전고용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이었던 것이다.¹¹⁾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 제도, 즉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장 전략 또한 심각한 재정 제약의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3.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분석: 1980~1995

2절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은 결국 임금분산을 축소하는 노동시장 제도는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정치적으로 선택하게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중앙교섭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임금분산을 축소한다.

가설 2. 임금분산이 적은 사회일수록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정책의 발전 정도는 높다.

가설 2는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2절의 이론모형에 기초한 것이다. 중위소득을 가진 투표자가 투표에서 콩도세르 승자가 된다는 공리를 따른다면, 임금분산 정도가 적은 사회에서는 중위소득자의 선호에 의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이 선택된다. 한편 가설 1은 가설 2에서 외생변수로 삼았던 임금분산을 내생변수로 보고, 그것이 노동시장제도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3절에서는 14개 복지국가¹²⁾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자료의 제약 때문에 분석의 시기는 1980~1995년으로 제한한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보다 1개년도 앞선 자료를 반영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이다. 1980~1995년의 분석 시기는 시민주의 국가들에서 중앙교섭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사라진 이후이긴 하지만, 또 다른 토끼인 임금분산 축소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또 다른 노동시장 제도로 형성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가 정착된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절의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11) 물론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확장은 여성의 급격한 고용확대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12) 분석대상인 14개 국가들은 OECD 회원국들인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이다.

1) 변수의 정의

① 임금 결정에서의 중앙교섭 정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된 서열변수이다.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 분산적으로 임금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을 부여한다. 산업 수준에서 임금결정이 이루어지지만 패턴교섭(pattern bargaining)¹³⁾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2를, 패턴교섭이 존재하는 산업 수준의 임금 결정에는 3을, 중앙교섭에 의해 임금을 결정하지만 개별 단위에서의 추가적인 임금협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4를, 개별 단위의 추가적인 임금협상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의미의 중앙교섭에는 5를 부여한다. 이 변수는 Evelyne Huber, Charles Ragin, John D. Stephens, David Brady, and Jason Beckfield. 2004.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Northwestern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and Indiana University에서 구했다.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발전정도는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액으로 측정한다. OECD. 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2007)를 활용하였다.

③ 정부부문 고용의 비중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5세 미만)중에서 정부부문에 고용된 민간인(군인, 경찰 등은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의 Evelyne Huber, Charles Ragin, John D. Stephens, David Brady, and Jason Beckfield(2004)를 활용한다.

2절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에 따르면, 사회전체의 평균임금소득 대비 중위임금소득의 변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평균임금소득과 중위임금소득을 시계열로 측정한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임금소득의 분포가 대수정규분포한다면 임금소득의 특정 분위사이의 비율이 평균임금소득 대비 중위임금소득의 비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¹⁴⁾을 활용하여 $\ln(p90/p10)$ 과 $\ln(p50/p10)$ 를 대리변수로 활용한다.

④ $\ln(p90/p10)$ 은 90분위에 해당하는 임금소득과 10분위에 해당하는 임금소득 사이의 비율을 구하

13) 특정 지역, 혹은 사업장에 이루어진 단체협약이 타 지역이나 타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소위 수평적 조율의 대표적인 방법을 말한다.

14) 임금소득의 분포가 대수정규분포한다면, $mean = \exp(\mu + \frac{\sigma^2}{2})$, $median = \exp(\mu)$ 이다. 이로

부터 $\frac{median}{mean} = \exp(\frac{-\sigma^2}{2})$ 이다. 따라서 $w_i > w_j$ 라면 $\ln w_i - \ln w_j = k_{ij}\sigma$ 인데, 이를 σ 에 대해 정리하면 $\sigma = k_{ij}\ln(w_i/w_j)$ 이다. 여기에서 w_i 가 i 번째 분위의 소득이고, w_j 가 j 번째 분위의 소득이라면, k_{ij} 는 i 와 j 에 따라 결정되는 어떤 상수이다. 따라서 $\ln(w_i/w_j)$ 는 σ 와 어떤 상수의 곱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평균임금소득 대비 중위임금소득의 비율을 추정하는 대리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여 대수로 나타낸 것이며, $\ln(p_{50}/p_{10})$ 은 50분위에 해당하는 임금소득과 10분위에 해당하는 임금소득 사이의 비율을 구하여 대수로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임금 분산 지표 중 하나만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분석의 신뢰성을 위해 두 개 모두를 분석에 활용한다. 각각의 임금 분산 변수는 Evelyne Huber, Charles Ragin, John D. Stephens, David Brady, and Jason Beckfield(2004)에서 구했다.

모든 복지정책이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OECD에서 추계하는 사회복지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건(health)과 가족(family), 주거(housing), 그리고 기타는 임금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정책에서 이러한 항목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즉, 복지정책의 탈상품화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질병이나 재해 등 무능력 관련 급여 및 실업 항목만으로 구성된 복지정책의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¹⁵⁾.

⑤ 복지정책의 발전정도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질병이나 재해 등 무능력 관련 급여, 실업급여를 더하고, 그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한다. 이 변수는 OECD, 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2007)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몇 개의 통제변수를 분석모형에 투입한다.¹⁶⁾ 경제성장과 물가수준, 그리고 실업률은 임금분산과 복지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이므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요인도 중요한데, 우선 당파성과 복지정책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논의하는 선행연구들(Stephens, 1979; Korpi, 1983; Huber and Stephens, 2001)에 따라 당파성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한다. 투표율 또한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Lijphart, 1997), 통제변수로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복지정책이 발전한다(Pampel and Williamson, 1989)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한다.

⑥ 1인당 실질경제성장률은 당해 연도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액에서 전년도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액을 뺀 값을 분자로, 전년도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액을 분모로 하여 산출하였다.

⑦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구했다.

⑧ 당파성은 우파정당의 지배력을 통해 측정했다. 당파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사민주의 정당의

1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며, 이 연구의 이론모형에서는 그것을 임금분산을 축소하는 노동시장제도로 정의하므로 탈상품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범주에서는 제외한다.

16) 분석에 투입하는 모든 통제변수는 Evelyne Huber, Charles Ragin, John D. Stephens, David Brady, and Jason Beckfield(2004)에서 구했다.

지배력 뿐 아니라 종교적 이념에 기초한 중도 정당의 지배력 또한 복지정책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Huber and Stephens, 2001). 그러한 논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당파성을 시민주의-중도정당 vs. 우파정당으로 구분하고, 집권여당의 각료 중에서 우파정당 각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1946년부터 누적한 수치를 우파정당의 지배력 변수로 활용한다.

⑨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중 주요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의 비율을 통해 구했다.

⑩ 노인인구의 비중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했다.

2) 분석방법과 분석모형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전형적인 결합시계열 자료이므로, Beck and Katz(1995)에 의해 제시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결합시계열 회귀분석을 택한다. 또한 자기상관의 문제는 선형모형에 적합하도록 잔차를 수정하는 잔차수정 모형(error correction model; Plümper, Manow, and Troeger, 2005)을 통해 해결한다.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다.

$$(1) \ln(w_{p1}/w_{p2})_{nt} = \beta_1 LIns1_{nt-1} + \beta_2 LIns2_{nt-1} + \beta_3 LIns3_{nt-1} + \sum_{j=4}^j \beta_j Z_{nt-1} + \epsilon_{nt-1}$$

$$(2) target_{nt} = \beta_1 \ln(w_{p1}/w_{p2})_{nt-1} + \sum_{j=2}^j \beta_j Z_{nt-1} + \epsilon_{nt-1}$$

모형 (1)에서 w_{p1}/w_{p2} 은 임금분산의 정도를, $LIns1$, $LIns2$, $LIns3$ 은 노동시장 제도변수로 각각 임금결정에서의 중앙교섭 정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발전정도, 정부부문 고용 비중의 크기를 나타낸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세 개의 노동시장 제도 변수들의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진다면(즉, 임금분산의 정도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낸다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 모형에 따른 두 번째의 가설은 검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형 (2)에서 $target_{nt}$ 는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정책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임금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w_{p1}/w_{p2} 변수의 회귀계수의 부호가 음(-)의 값을 가진다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 모형에 따른 첫 번째의 가설이 검증된 것이다. 한편,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Z 는 통제변수들이다. 또한 n 은 국가 id를, t 는 년도 id를 나타낸다.

3) 분석결과

분석결과를 보자. 먼저 <표 1>은 중앙교섭정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크기, 그리고 정부부문

고용의 크기와 같은 노동시장 제도가 임금분산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표 1>의 분석모형 (1)부터 (3)까지는 임금분산 정도를 90분위에 해당하는 임금소득과 10분위에 해당하는 임금소득 사이의 비율을 구하여 대수로 나타낸 $\ln(p90/p10)$ 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모형이다. 한편 분석모형 (4)는 50분위에 해당하는 임금소득과 10분위에 해당하는 임금소득 사이의 비율을 구하여 대수로 나타낸 $\ln(p50/p10)$ 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것이다. 모든 분석 모형에서 노동시장 제도들의 발전은 임금분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통계변수들을 보면, 우파정당의 지배력이 강할수록 임금분산은 확대되는 반면에 투표율의 증가는 임금분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1> 노동시장 제도가 임금 분산에 미치는 효과

	1	2	3	4
중앙교섭정도	-.0304(.0061)**	--	-.0340(.0063)**	-.0230(.0054)**
적극적노동시장정책	-7.4801(1.7492)**	--	-5.1909(1.6966)**	-4.9199(1.3360)**
정부부문 고용	--	-.0149(.0022)**	-.0079(.0020)**	-.0055(.0018)**
1인당실질경제성장률	-.0001(.0021)	.0008(.0014)	-.0001(.0022)	-.0002(.0018)
실업률	.0055(.0030)*	.0003(.0029)	.0040(.0031)	.0021(.0026)
우파정당의 지배력	.0048(.0009)**	.0041(.0010)**	.0041(.0008)**	.0011(.0007)*
투표율	-.0073(.0008)**	-.0070(.0008)**	-.0073(.0007)**	-.0036(.0006)**
상수	1.6561(.0731)**	1.7424(.0778)**	1.7648(.0703)**	.9180(.0526)**
조정된 R^2	.86	.86	.86	.72
사례수	199	262	196	196

1. 분석 모형 1~3은 종속변수로 $p90/p10$ 을, 분석모형 4는 종속변수로 $p50/p10$ 을 투입함.
2. 괄호 안은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를 나타냄.
3. ** $p < .01$ * $p < .1$

<표 2> 임금분산이 복지정책의 발전수준에 미치는 효과

	1	2
임금분산의 증가 1($p90/p10$)	-.0413(.0139)**	--
임금분산의 증가 2($p50/p10$)	--	-.0657(.0170)**
1인당실질경제성장률	-.0012(.0003)**	-.0012(.0003)**
실업률	.0022(.0006)**	.0020(.0006)**
우파정당의 지배력	-.0013(.0001)**	-.0014(.0001)**
투표율	-.0002(.0002)	-.0001(.0001)
노인인구의 비중	.7246(.0757)**	.6578(.0824)**
상수	.0912(.0313)**	.0866(.0246)**
조정된 R^2	.77	.78
사례수	218	218

1. 괄호 안은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를 나타냄.
2. ** $p < .01$

한편, <표 2>는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정책의 발전 정도에

임금분산의 축소가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이다. 분석모형 (1)에서는 평균임금소득 대비 중위임금소득 비율의 대리지표로 $\ln(p90/p10)$ 변수를, 분석모형 (2)에서는 $\ln(p50/p10)$ 변수를 투입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두 경우 모두에서 임금분산의 확대는 복지정책의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임금분산이 적은 사회일수록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정책의 발전 정도는 높다는 것이다.

4. 요약 및 함의

노동시장 제도가 임금분산에 영향을 미치며, 임금분산은 사회성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노동시장 제도와 복지정책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노동시장 제도를 통한 임금 분산의 축소 전략이 탈상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막을 내린 ‘복지국가의 황금기’ 이후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것¹⁷⁾은 바로 ‘제 3의 길 노선’이었다.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집권에 성공한 영국의 블레어 정부와 독일의 슈뢰더 정부에 의해 ‘제 3의 길’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시민주의와의 결별과 신자유주의의 거부로 요약되는 ‘제 3의 길’ 노선은 1980년대 이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에겐 일종의 금과옥조였다. 대체로 ‘제 3의 길’ 노선에서 강조하는 개혁의 핵심은 사회성원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격려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간점검을 해 보면 ‘제 3의 길’ 노선은 결코 하나의 길이 아니며, 그 성과 또한 나라마다 엇갈린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특히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임금 분산의 확산에 대한 대응방식은 큰 차이를 가지며, 아마도 그 점이 ‘제 3의 길’ 노선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탈공업화와 세계화의 시대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나 임금 분산의 확산을 억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정부부문 고용을 증가시키거나(스칸디나비아 유형), 임금분산의 억제를 포기한 고용 증진 조치들(영국 유형)이 택해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임금 분산의 확산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정책의 기제만을 통해 불평등을 축소하려 한다면 기대하는 사회경제적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두 제도들은 갈등적인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사회성원 사이의 정치적 균열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고용형태 추이를 보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은 민간 서비사업 중심의 고용확대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임금분산의 확대와 동반하고 있다. 이 연구의 논의와 같이 정책들 사이의 정합성이 정책의 이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면 임금

17) 적어도 유럽 연합에서 1990년대는 사회민주주의의 시대였다. 이러한 점은 1990년대 말까지만해도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가운데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지 못한 나라는 스페인과 아일랜드 드뿐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분산의 확대를 직접 거당한 정책을 모색하거나 임금분산의 확대추세를 수용하면서 그에 부합하도록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 백승호. 2005.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안상훈. 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연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205-230.
- Amable, B. 2003.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ck, N., and J. Katz. 1995.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Series-Cross-Section Data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3): 634-47.
- Baldwin, P. 1992. *The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lass Bas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1875-197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ck, D. 1948. “On the Rationale of Group Decision Mak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6: 23-34.
- Hall, P., and D. Soskice. 2001.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pp. 1-68 in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edited by P. Hall and D. Sosk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9. “Politics without Class? Postindustrial Cleavages in Europe and America.” pp. 293-316 in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edited by H. Kitschelt, P. Lange, G. Marks, and J. D. Steph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eman, R. 1988.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Economic Policy* 3: 64-80.
- Friend, I., and M. E. Blume. 1975. “The Demand for Risky Assets.” *American Economic Review* 65: 900-22.
- Goldthorpe, J. H. ed. 1984.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Oxford: Clarendon Press.
- Hibbs, D. A., and H. Locking. 2000. “Wage Dispersion and Productive Efficiency: Evidence for Swed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4): 755-82.
- Huber, E., and J. D. Stephens. 2001.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Parties and Policies in Global Marke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versen, T., and D. Soskice. 2001.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75-93.
-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Lijphart, A. 1997. “Unequal Participation: Democracy’s Unresolved Dilemm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1-14.
- Meltzer, H., and S.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914-27.
- Moene, K. O., and M. Wallerstein. 1999. “Social Democratic Labor Market Institutions: A Retrospective Analysis.” pp. 231-60 in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edited by H. Kitschelt, P. Lange, G. Marks, and J. D. Steph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Inequality, Social Insurance, and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59-74.
- Pampel, F. C., and J. B. Williamson. 1989. "Welfare Spending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1950-198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6): 1424-56.
- Persson, T., and G. Tabellini. 2000. *Political Economics: Explaining Economic Policy*. Cambridge: the MIT Press.
- Plümper, T., P. Manow, and V. Troeger. 2005. "Pooled Data Analysis in Comparative Politics: Linking Method to Theor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4(2): 327-54.
- Roberts, W. S. 1977. "Voting over Income Tax Schedul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 329-40.
- Romer, T. 1975. "Individual Welfare, Majority Voting, and the Properties of a Linear Income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 163-85.
- Stephens, J. D. 1979. *The Transition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London: Macmillan.

Labour Market institutions, Wage Dispersion, and Social Policy

Hong, Kyung-Zoon
(Sungkyunkwan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want to demonstrate wage equality increases support for welfare expenditures while the wage equality depends on how labour market institutions are organized. In other words, this study tries to show that there can b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inequality-reducing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generous social policy. In the first section, I develop a theoretical models which deal (1) how the inequality of income affects the political support for welfare expenditure (2) how the configurations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affect income in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In the following section, this study tests the models with data on welfare spending, configurations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inequality of wage and salaries in 14 welfare states from 1980 to 1995. Empirical analysis also provides support for key implications of the models. These models and empirical findings may show that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stems from the interdependence of institutional influences on actors' decision-making.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welfare policy are always considered with labour market institutions.

Key words: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labour market institutions, median voter, wage inequality, social policy

[논문 접수일 : 07. 08. 06 게재확정일 : 07. 09. 18]